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정치)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④ 2. ③ 3. ⑤ 4. ① 5. ② 6. ③ 7. ③ 8. ④ 9. ② 10. ④
11. ① 12. ⑤ 13. ④ 14. ① 15. ⑤ 16. ⑤ 17. ③ 18. ⑤ 19. ③ 20. ②

1. 아테네 민주 정치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제도는 도편추방제이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의 축출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졌으나, 이후 참주와는 관계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민회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추방함으로써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횡포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도편 추방제의 악용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중우 정치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답피하기

ㄷ. 엘리트 위주의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에서 시민의 참여가 배제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2. 권력 분리의 원리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을 보면 의회는 입법부이지만 입법 활동 이외에 조사 활동을 담당하기도 하고, 법원은 사법부이지만 법적 해석을 통해 입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행정부는 법 집행과 함께 입법 활동을 담당하기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절대 권력의 등장과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자유의 의미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유로 ‘국가에의 자유’에 해당한다. (나)는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로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달리 ‘국가에의 자유’나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국가에의 자유’, (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② 신자유주의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 ③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강조한다. ④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사상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반면 ‘국가에의 자유’나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이다.

4. 헌법의 기본 이념 이해

정답 해설 : 독일 연방 공화국 헌법 제1조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규범임을 밝히고 있다. ② 인간 존중이라는 초국가적 자연법의 원리를 헌법에 수용한 것이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권력의 의무를 강조하여 국가 권력 행사의 목적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④ ‘침범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에서 인권의 불가침성과 기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헌법이라는 실정법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시민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의 천부인권적 권리이다.

5. 정부의 역할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작은 정부론’이나 ‘소극적 국가론’, (나)는 시장 질서 유지와 경제적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큰 정부론’이나 ‘적극적 국가론’과 부합한다. ㄱ. (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ㄴ. (나)는 경제 문제나 경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한다.

오답피하기

ㄴ. 정부의 역할을 치안과 국방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 국가론은 ‘소극적 국가’를 지향한다.

ㄷ. (가)가 ‘작은 정부’, (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6. 평등 선거의 원칙 파악

정답 해설 : 재외 국민들에게도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성별, 학력, 재산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①과 ④는 직접 선거, ②는 비밀 선거, ⑤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해당한다.

7. 결선 투표제의 의미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1위와 2위를 한 A당 후보와 C당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이다. 결선 투표제는 결과적으로 당선자를 배출하는 표를 늘려 사표 발생을 줄이고, 이를 통해 당선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오답피하기

- ① 두 차례에 걸친 선거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
- ② 평등 선거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결선 투표제의 효과로 볼 수 없다.
- ④ 유권자의 의사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 ⑤ 1차 투표에서 B당과 D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2차 투표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지 후보를 지속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은 약화된다.

8.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 방안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참정권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 제도 채택, 민주적 선거 제도에 바탕을 둔 대의제 채택 등이 있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평화를 위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확대는 국제 평화주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9. 선거 제도 분석

정답 해설 : 갑국의 지역구는 200개이고, 지역구 의석수도 200개이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ㄱ.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정당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C당의 경우는 정당 투표에서 D당과 마찬가지로 5%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20석을 얻은 D당과 달리 C당이 4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갑국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서 일정 수 이하의 지역구를 얻은 정당에게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을 두고 있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 ㄴ. 지역구 선거에서는 선거구당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므로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만이 당선된다. 따라서 다수 대표제가 채택되고 있다.
- ㄴ. 지역구 의석수가 일정 수 이하인 정당에게는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 의원내각제 정부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가) 정부 형태 특징에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다루고 있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내각제 정부의 주요한 특징이다.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함께 내각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각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 정부에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수상)이 선출된다.

오답피하기

- 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권한이다.
- ㉕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에 의해 각각 구성되는 것은 대통령제 정부의 특징이다.

11.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성격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인터넷의 정치 사회화 기능, (나)는 사회적 의제 형성의 기능, (다)는 대의제 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 제공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값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태도와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을은 새로운 언론 매체인 인터넷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여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병은 대의제 하에서 시민들이 인터넷 투표 등을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정치 참여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 중선거구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를 4개로 통합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높아진다.

오답피하기

- ① 중선거구제에서는 정당별로 1-2명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후보자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어려워진다.
- ② 2위를 한 후보자도 당선이 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 비해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중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에 비해 당선자 배출에 기여하는 표가 많아져 사표 발생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선거구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작아진다.
- ④ 선거구의 크기가 커져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줄어든다.

13. 선거구제 변경의 영향 분석

정답 해설 : ㄱ. 1안으로 변경할 경우 선거구의 크기는 280, 275, 320, 325(천명)이

다. 반면 2안으로 할 경우에는 선거구의 크기가 모두 다 300(천명)이다. 따라서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같은 2안에서 표의 등가성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된다. ㄴ. A당은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마, 바, 사 세 선거구에서 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반면 1안으로 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각 선거구에 1명의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최소한 4명의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으며 마-바 선거구에 2명을 공천할 경우 5명의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안이 더 유리하다. ㄷ. 현행 선거에서 C당과 D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한다. 2안으로 실시할 경우 C당은 다-사 선거구에서 1석을 얻을 수 있으며, 1안으로 실시할 경우 D당은 마-바 선거구에서 1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 제도보다 유리하다.

오답피하기

ㄷ. B당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5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2안으로 선거가 치루어지면 다-사 선거구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할 수 없어 3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안이 더 유리하다.

14. 정치 권력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은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인 정치 권력이다. ① 정치 권력은 국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다.

②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합법적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이 창출되어야 정당성을 가진다.

③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권력의 획득 과정과 행사 과정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3권 분립 등 제도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정권이 바뀌면 정치 권력의 담당자가 바뀌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 권력은 지속된다.

⑤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행사가 법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민주 사회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15.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 사회계약론자 홉스, (나)는 로크의 주장이다.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권자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로크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은 시민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①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② 홉스는 자연권의 전부 양도를 주장한 반면, 로크는 일부 양도를 주장하였다.

③ 홉스와 로크 모두 정치 권력은 자연권을 가진 개인 간의 사회 계약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 권력은 인위적인 질서라고 인식하였다.

④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로크는 자연권을 확실히 누리기 위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의 자연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16. 정치 과정의 이해

정답 해설 : 투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것, 선출은 투입된 요구에 따라 정책 결정 기구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 환류는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이다. ⑤ 환류 과정을 통해 시민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요구가 투입된다.

오답피하기

- 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임입법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명령·규칙의 제정권이 해당한다.
- ② 의회의 입법 과정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산출 과정에 해당한다.
- ③ 언론은 정책 결정의 비공식적 참여자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 ④ 시민 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17. 선거 결과 변화 분석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10대 의회는 A당과 B당의 양당 체제로 다수당인 A당이 집권당이였다. 반면 11대에서는 신생 정당인 C당이 B당과 연합하여, 12대 의회에서는 B당과 C당, 그리고 신생 정당인 D당의 연합으로 정부가 구성되었다.

- ① 양당제 의회에서 점차 다당제 의회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②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늘어나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③ 10대 의회에서는 A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했지만 11대와 12대에서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집권 정당 간에 정책 협의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④ 연립 정부의 구성으로 다양한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 ⑤ 연립 정부가 구성되면 단독 정부에 비해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18. 정치 사상의 파악

정답 해설 : 사례된 글에서는 현명한 군주는 귀족에 대한 호의로 백성의 미움을 사거나 백성에 대한 호의로 군주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중립적인 제3의 심판 기관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귀족들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과 ② 귀족들과 백성 중 어느 한쪽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③과 ④ 군주가 중립성을 견지하고 갈등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심판 기관을 통해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19. 정당의 재정 구조 분석

정답 해설 : A당은 자발적 당비 납부율이 높고, 후원금 수입 중 대부분이 일반 개인의 소액 기부이다. 반면 B당은 자발적 당비 납부율이 낮고, 후원금 수입 중 대부분이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치 자금이다.

ㄴ. 당비 납부는 당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자발적 당비 납부 비율이 높은 A 정당의 당원들이 B당의 당원보다 정당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이다.

ㄷ. 후원금의 대부분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B당은 이익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ㄱ. 두 정당의 수입 규모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40%인 B당이, 국고 보조금 비율이 20%인 A당에 비해 국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

ㄷ.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인 A당이 당비 비중이 10%인 B당에 비해 당비 납부율에 비례하는 국고 보조금의 배분을 선호할 것이다.

20. 이익 집단의 특성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울 경우 사회적 갈등의 유발이나 공익의 훼손, 정경 유착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 집단의 배타적인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답피하기

① 의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이익 집단이 정계 진출을 통해 집단의 이익 관철을 도모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다.

④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⑤ 특수 이익의 실현을 위해 정치인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권과의 야합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